

간접고용 · 소수노조, “우리도 교섭 좀 합시다”

원청 사용자성 ·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결의대회... “교섭 창구 단일화는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악법”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 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행정부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달라” 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금속노조 아홉 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두 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한 개 사업장이 접수한 공동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한 1차 조정 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8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힘없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은 외면하고, 금융과 재벌 대기업에 수백조 원의 국가재정을 쏟아부었다고 날을 세웠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을 위해 하청 바지사장이 아



닌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김희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이 이주노동자까지 이용해 과반 노조를 만든 뒤 노동조건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주야 12시간 맞교대, 연간 3,500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외주화에 맞서 금속노조를 만들었다.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단협 적용은 하지 않고, 조합비만 내리며 억지로 어용노조에 끌어들이었다” 라고 폭로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만 표적 징계하고 보직 해임했다. 어용노조는 결국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라고 분노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3권이 없는 소수노조는 식물노조에

불과하다” 라며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

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무조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 라고 비판했다. 김현재 지회장은 “정부와 현대차는 올해 반드시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라며 진짜 사장과 한판 붙어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동 쟁의 조정신청 조정 결과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6월 1일, 민주일반연맹은 6월 4일에 나올 거로 내다봤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조합원 숫자만으로 다수 노조와 소수노조를 구분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냈다. 금속노조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복수노조 사업장 앞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악질 일진, 함께 위기 돌파하자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일진그룹 노조파괴 철회 촉구 기자회견...본사 관리직·입주 업체까지 동원해 8억 소송

“노조파괴, 손배 가압류 일진 자본 규탄한다.”

“사람 잡는 손배 가압류 지금 당장 철회하라.”

분노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서울 마포대로에 울려 퍼졌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5월 26일 오전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그룹 노조파괴행위,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재준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회사가 겪게 될 어려움을 현장에서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11개월 동안 이어온 파업을 중단하고 6월 1일 복귀한다”라며 지회 상황을 설명했다.

충북 음성공장에서 일하는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유해물질과 갖은 위험요소에 노출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장기근속자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2018년 12월 29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마지못해 교섭에 나왔으나 묵묵부답과 모르쇠로 버티며 노동조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임금·단체교섭 차수가 쌓였지만, 회사는 버텼다. 결국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답했다. 2020년 5월 26일로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전면파업 336일, 직장폐쇄 289일을 맞았다.

홍재준 지회장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금속노조는 같이 살자



는 마음 하나로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라며 “사측은 노동자가 내민 손을 잡기는커녕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손배·가압류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죽고 사는 문제”라며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일진그룹과 일진다이아몬드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 11명에게 네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액은 8억 2천4백여만 원이다. 소송 중 하나는 일진그룹 본사 건물에서 일하는 사무관리직과 식당 등 입주 업체 관계자 1백46명이 제기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일진 자본에 치가 떨린다. 건물 입주 업체의 등까지 떠밀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하는 일과 사업장은 다르지만 같은 일진 노동자 아닌가. 회사 압박 없이 사무관리직 스스로 소송을 했을 리 없다”라며 “노동자 사이 갈등까지 만들어내는 일진은 정말 잔인한 기업”이라며 성토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는 악법 중

의 악법으로 당장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 동료의 삶을 뿌리째 뒤흔든다”라며 “정당한 노동자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을 손배·가압류로 탄압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헌법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이쉬움을 뒤로 하고 일진 노동자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데 사측은 고소·고발도 모자라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과 노동자 삶을 파괴할 작정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일진다이아몬드 사측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금속노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배·가압류 문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복귀 인사를 했다. 홍 지회장은 “망가진 일진 노동현장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운다는 우리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안하고 고맙다”라며 6월 1일 복귀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뭉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금속노조 가입부터 파업까지 함께 해왔다”라며 “손배·가압류를 해당 몇몇 개인 문제가 아닌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전체 일로 받아들여 끝까지 함께 해결하자”라고 독려했다.

21대 국회, 노동자 학살 책임 벗으려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돌입... “최고 경영자·원청 처벌해야 죽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회찬 의원이 2017년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5월 29일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용균 재단 등은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한해 2,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3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때죽음을 당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과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20대 국회는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행동에 들어간다”라고 농성 투쟁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



에서 “청년노동자 김용균 동지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중대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 산업법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5월 21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매달 노동자가 죽어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겠나”라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죽지 않기 위해 21대 국회 앞 행동 시작”

김동성 부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시간만 끌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매년 2,400명의 노동자를 학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대표한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는 “산업재해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을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 산업법으로 살아있는 김용균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김미숙 대표는 “기업이 안전에 조금만 투자해도 죽지 않았을 노동자가 살해당하고 있다. 강력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앞

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영등포역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이어가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과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해결을 위한 국회 농성 첫날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등은 6월 10일까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2012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안 준비 작업을 시작해, 2013년 산안법 개정안과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 특별법은 기업 처벌, 특히 최고 경영자 처벌과 원청기업 처벌, 기업의 가중·징벌 손해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산업 안전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김선동 의원이 ‘기업 살인처벌 법안’을, 한정에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시민재해까지 특별법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공무원 처벌까지 담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다. 민주노총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연대>의 노력 끝에 20대 국회인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끝까지 특별법에 대해 논의조차 한번 하지 않고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